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들꽃 눈부시다

쫄쫄한 봄날
깨어진 술병 너머
가끔 낮은 울음으로 찾아드는 그 곳
풀 샅에 고이는 고단한 노동과
낮게 깔린 지붕에 매달린
한 그릇의 밥과 사랑
야원 강둑
부스러진 흙더미 위
차마 구겨진 신문의 아우성
겨우내 앓던 하얀 그리움으로
마른 슬픔으로
한바탕 봄 하늘 뒤척이는 것
얼마나 비 내리고 바람 불어야
얼마나 더 남 몰래 울어야
뜨겁게 활활 피어오를 수 있을까
가만 눈 마주치며
출렁 다가서는 황홀한 두려움
사내들의 질끈 감은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햇살
들꽃 눈부시다



김희식

- 시인, <분단시대>문학동인, 한국작가회의 이사. 충북문화예술포럼 예술분과장
- 시집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공저, 1986, 한마당
『유월의 거리에 서서』 2007, 고두미

CONTENTS

2011.05. Vol 210

Cover Story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 광역의회 자치단체, 정치권, 주민 등 1만여명이 4월9일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음모 분쇄 500만 충청인 결기대회'를 가졌다.

04 과학벨트 사수 '헌신의 노력'

- 500만 충청인 결기대회 참여
- 충청권 집중배치 촉구 건의문 채택
- 서명운동에 앞장서 도민이지 결집

07 '일하는 의회'로 자리 잡았다

08 상임위원회 활동

14 주요처리의안

16 도정질문 · 답변

21 5분 자유발언

24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26 의정활동 이모저모

30 의원 논단

31 의정일기



“나눠주기식 분산배치 절대 안된다”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혼신’

충청인 쫓기대회 참여, 집중배치 요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운동에 적극 앞장서 온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최종 입지선정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나눠주기식 분산배치 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수없이 확인했던 충청권 입지 공약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분산배치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충청권 3개 시·도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청권 비상대책 위원회와 함께 51주년 4·19 기념일에 청주체육관 앞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 음모 분쇄를 위한 500만 충청인 쫓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충청권 집중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1만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쫓기대회

에서 비상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500만 충청인은 이명박 정권이 과학벨트를 끝내 나눠주기식 정치벨트로 만든다면, 4.19 정신을 이어받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충청인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정권퇴진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집중배치 촉구 건의문 채택

충북도의회는 대외적인 활동과 함께 대내적인 의정활동에서도 과학벨트 사수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도의회는 임시회는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도와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대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4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과학벨트 충청권



의 노력'

사수를 위해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21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권 집중배치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과학벨트 분산 배치는 영남권 민심달래기와 함께 ‘나눠주기식 줄속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접근해 입지를 당초 약속한 충청권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과학벨트 충청권 집중배치가 최종 확정될 때 까지 도민, 충청권 비상대책위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후보지 10곳 압축 ‘세종시 탈락설’ “다른 지역 몰아주기 위한 것” 우려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 입지평가위원회가 후보지를 10곳으로 압축하고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제안한 세종시는 탈락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전국 53곳의 대상지중 대전,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천안, 청원, 창원, 포항, 구미 등 모두 10곳을 후보지로 선택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충청권 지방의회, 자치단체, 정당, 사회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 범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세종시를 제외해 충청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몰아주거나 나눠먹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과학벨트 최적지가 세종시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된 지금에서 후보지역 10곳에조차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세종시를 탈락시킨 것은 과학벨트 현안에 대한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와 협력을 깨기 위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탈락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평가점수를 비롯해 입지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명운동에 앞장서 도민이지 결집

충북도의회는 또한 과학벨트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4일까지 25일간 펼쳐진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민들의 충청권 입지 사수 의지를 모았다. 도의회 의원들은 일정별로 청주 성안길과 각 지역에서 도민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충청권 집중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명운동에는 전체 충청도민의 55%인 82만 여명이 참

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대전광역시에서는 100만명, 충남도에서는 60만명 등 충청권에서 모두 242만명이 서명에 동참해 충청인들의 과학벨트 사수 의지를 확인시켰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문

최근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안되었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핵심 시설을 분산 배치할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익을 높이고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과학계의 의견을

100% 수렴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영남권 민심 달래기와 함께 ‘나눠주기식 졸속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배치에 적극 반대하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접근하여 당초 약속한 충청권에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일하는 의회’로 자리 잡았다

회기·비회기 안 가리고 현안에 적극 대처

충청북도의회가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일하는 의회’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처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상임위원회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책수립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수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던 도의회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곧바로 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협의했다. 건설소방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가 중심이 된 간담회에서는 충북지역의 지진대책과 내진설계현황, 농식품 수출 등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

과 간담회를 마련해 재난대비

교육, 학교시설물 내진설계 등 지진대책을 논의했다.

조례제정 등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도 활발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3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이어 4월에는 도내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 지회장 등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문화예술분야 정책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지난 3월에 충북도와 도교육청 회계 담당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추진 실태 확인과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확인도 이어졌다.



▲ 보은 대추연구소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황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청회, 간담회, 현장 확인 등 상임위별로 활발한 활동

정책복지위원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청주의 청람재와 서울의 충북미래관을 방문해 시설

개선 등 학생 편의제공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며 행정문화위원회는 증평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괴산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 괴산군 청천면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충주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현장을 방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지난 3월 청주 우암초등학교를 찾아 급식 실태를 점검했고 충주 수희초등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 교육 우수사례 및 폐교위기 극복과정을 확인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괴산 사리, 증평 도안, 음성 금왕, 진천 문백 등 4개 지역 구제역 가축 매몰지를 확인했으며 소방건설위원회는 청원 옥산, 영동 추풍령의 도계마을 정비사업, 옥천 동이면의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 298·299회 임시회)

의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가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희)는 3월 17일 제298회 위원회를 열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 했다. 그리고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및 의안심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임시회의 세부일정은 4월 12일에 개최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4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박문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 제299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 첫날인 4월 12일 원안 가결했다.

4월 21일에 개최된 제299회 위원회에서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의장이 추천한 결산 검사위원은 도의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그리고 유경험자 2명 등 총 8명이며,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하기로 했다.

또한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 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도정질문 및 의안심사,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했다. 임시회 세부일정은 5월 10일에 개최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5월 12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 298·299회 임시회)



충북학사 등 찾아 지역인재 양성 지원 방안 논의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 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한데 이어 제299회 임시회에서도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4월 299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고 「장애인 가족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람재와 서울의 충북학사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현황을 확인했다.

회기 중 심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 중 임명공무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또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장애

인 가족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렸다.

「장애인 가족지원조례」는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청원 2, 민노)이 제안한 것이며 공청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과 우리 도의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도경 의원은 주제설명을 통해 “그 동안의 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춰 온 장애인 복지정책이 이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가족에 초점을 둔 복지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장애인단체 도연합회 남상래 회장, 지체장애인 충북협회 변창수 회장, 지적장애인복지 충북협회 임승빈 회장, 여성장애인연합 충북지부 강경희 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민용순 지부장, 정책복지위원회 한장훈 자문위원, 충청북도 복지장애인과 최정옥 과장이 공술인(公述人)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종합적인 검토 후 오는 6월경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행정문화위원회

(제 298·299회 임시회)

생태공원 조성사업장 방문 등 현장의정 펼쳐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제298회와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심사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을 포함한 4곳을 현지 확인 하는 등 활발한 현장의정을 펼쳤다.

또한, 도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제도마련을 위한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조례 관련 ‘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서관 분야 전문가와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는 등 소통과 교류의 위원회 운영에 전력을 기울였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28년 전 건축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 중인데 최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현지 확인을 통한 현황 파악 후 재건축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했다.

충주2013충주세계조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방문에서 위원들은 대회준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

설·홍보·안전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 파악을 위해 증평군 삼기저수지, 괴산군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한 위원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을 통한 도서관의 체계적·지속적 발전 도모와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이 용이하면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관련 제도마련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입법활동에도 전력을 다했다.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문화예술인과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집행부와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등 주요 현안을 듣고 2012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대응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 298·299회 임시회)



구제역 매몰지 현지확인·과학벨트 건의안 채택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확인하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한국 쌀전업농충청북도연합회와의 간담회, 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도내 기업체의 피해 점검과 농식품의 수출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3월 10일 괴산군 사리, 증평군 도안, 음성군 금왕, 진천군 문백 등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매몰현황과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청취한 후 침출수 발생 및 처리로 인한 지반침하, 악취발생 최소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위로하고 향후 보상문제와 생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공무원에게 조속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신속히 대응했다.

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청와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배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벨트는 국익을 높이고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으로 과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는 영남권 민심달래기와 함께 ‘나눠주기식 줄속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청와대,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에 전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 298·299회 임시회)



현지 확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강화 주문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도계마을육성사업 및 다목적 광장 추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또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 보고를 듣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민선5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계정 중 매년 지원예산의 5% 이상을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원군 강원면 정중리 일원에 IT, BT관련 생산 및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재원조달을 위하여 충북개발공사 사업비 2,253억원 중 1,500억원에 대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듣고 향후 공사채발행에 따른 부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영수지가 악화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4월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심사와 실국별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듣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정지구 및 혁신도시 현지를 확인했다. 또한 충북발전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관련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했다.

실국별 주요현안 보고에서는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브랜드 택시 도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제 298·299회 임시회)

보은·옥천지역 폐교 실태확인 거쳐 매각 승인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주학생회관 및 교육활동 우수교인 수희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3월 10일에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여 다원화된 사회에 맞는 인재로 키워줄 것을 당부했다.

3월 11일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에서는 지역교육청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다양한 지역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4월 제299회 임시회 중에도 「충청북도 교

육청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과 「보은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와 옥천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4월 13일 1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는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내 고등학교는 일반고 47개, 특성화고 29개,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6개, 자율고 1개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된다.

한편 「보은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와 옥천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차 교육위원회 의결에 앞서 보은 이원 폐교와 보은의 능월 폐교를 방문하여 실제적인 실태와 상황을 점검한 후 이루어졌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자활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심의 기능 추가
-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위원 자격 추가
-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도정 정책자문단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 고부가가치 영상사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 규정
-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촬영지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연수동, 회의실, 휴게실, 식당, 숙박동, 대강당, 관리사를 재건축하고 분관 등을 철거하려는 계획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고, 균형건설국 분장사무인 경보통제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등 직제순 업무 조정, 신규업무 추가, 이관업무 추가, 소멸업무 삭제에 대한 것 등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 현장수습 과정 운영, 표식 등을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원의 총수를 2,892명에서 2,924명으로 32명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2명에서 1,430명으로 28명 증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정원을 1,378명에서 1,382명으로 4명 증원) 이 중 8명은 한시정원임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를 폐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린이의 용어 정의 변경
- 청소년의 용어 정의 변경
- 군인의 용어 정의 변경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를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변경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 시험수수료 도보 고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명시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용어 및 일부조문 개정
- 국가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매년 지원예산의 5%이상 금액을 특별회계세입으로 하는 조항 신설 등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폐지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 중 임명공무원 규정(관계공무원 → 보건복지국장)
- 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 조정(4년 → 2년)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사용 용도와 재원조성 관련 조문 규정
-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조정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20세 이상 ⇒ 19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주신고 재외국민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 등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
-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어의 순화 및 변경
-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
-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 조정

충청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조(감사) 삭제
- 현행 :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도의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수정안 :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98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 답 변

노광기 의원(정책복지위원회)



복지재원 확충 관련

[질문] 복지재원 확충과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취임 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120억원의 절감재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저변의 농민, 노동자, 장애인, 전통시장 상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평생을 보살피는 복지실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도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실시계획

[질문] 무상보육이 지사님 임기 내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시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임기 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소산에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다만,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추가 재원이 크게 소요되고 보육시설, 보육교사 확보 등에도 무리가 있어 도의 재정운영이나 정부의 보육정책 변화, 보육교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의 보육정책 방향이 무상보육대상인 소득하위 70% 이하 까지 크게 확대되고 장애아,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전액 지원되는 점을 감안, 2014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향후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무상보육이 앞당겨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질문]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총복은 5년 주기로 중장기 보육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 도는 중장기 보육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계획을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보육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차별성 해소 방안

[질문] 어린이집은 8시간을 초과해도 지원이 없고 유치원은 3만원~5만원이 추가지원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별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설립법령, 임용요건, 운영기준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다소 무리이며, 전국 공통사항으로 국가차원의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질문] 현재 같은 대학을 나와도 보육교사보다 유치원교사의 수당이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우리도의 경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시간연장형 수당,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질병예방 대책

[질문] 시설유형별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차등지원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국·공립 등 정부지원 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30~100% 지원, 민간보육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 대신 기본보육료 지원 또는 보육료를 차등 수납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예산지원 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질문] 보육시설에 대한 질병예방 사업지원에 대한 견해는?

[답변] 보건소에서 도내 총 3,986개소의 취학지를 소독하고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역은 어려우나, 보육시설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방역소독과 예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박문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대책

[질문] 본 의원이 1월 도정질문시 현장을 확인하는 직원을 꼭 상주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담당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가 침출수 발생으로 지하수 오염, 악취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지난 1월 도정질문 이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직원 120명이 파견돼 전체 21개소의 매몰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매몰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은 물론 이후 중앙에서 점검을 직접 내려와 전체 매몰지를 조사하여 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는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수질업무 담당부서 지정 관련

[질문]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이를 식수로 사용하여 2차 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담당하는 수질관리과 즉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가 농정국으로 이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수질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1월 17일 TF팀을 만들어서 3개 반 14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후에 2월 22일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제역 총괄관리를 환경부서가 하지 말고 농림 축산부서에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2월 25일 이후 축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수질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수 및 생활용수 대책

[질문] 구제역 매몰지 농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먹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도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쪽으로 보도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지역주민들이 향후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 매몰지 인근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일단 지하수가 오염이 됐든, 안 됐든 땅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먹는 데는 심리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몰지 인근 5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인사운영 관리

[질문] 도지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권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 주변의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운영을 합리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민선5기는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검증된 인사 그리고 가능하면 전국적인 지명도와 인적 네트워크가 또 검증가능한 분 그래서 도정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자격 등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확인된 분 이렇게 해서 그 직위에 맞는 분들로 임명을 함으로써 그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299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 답 변

김종필 의원(산업경제위원회)



구제역 매뉴얼 지침준수 여부

[질문] 구제역 매몰지 바닥과 벽면에 벤토나이트, 자갈 사용 등 매몰 매뉴얼 지침이 있는데, 매몰지별 자재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니 자갈 구입예산은 대부분의 시·군에 없었고, 벤토나이트 구입 내역 또한 적거나 전혀 구입하지 않은 시·군도 있었습니다. 매뉴얼 지침대로 매몰이 잘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매몰지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충청북도는 구제역 매몰처리 지침을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고, 관계 부단체장들과도 회의를 통해 수차례 매뉴얼대로 처리해줄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3월초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매몰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대부분은 지켰다고 생각되지만 정부합동조사 결과 약 20군데가 지적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엔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농정국과 문화여성환경국이 협조를 해서 처리 하였습니다.

매몰지 주변지역 식수문제

[질문]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대책과 2차 피해대책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매몰지 주변 마을에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 7차에 걸쳐 1,294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특히 침출수 오염이 심히 우려되는 2개소에 대한 사업비 181억원은 배부가 돼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장 중심의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조직 체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식사육 관리·감독 방안

[질문] 구제역 백신은 1두 1침을 사용하되 농가단위로 접종이 끝난 뒤에는 5일간 접촉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있지만 도는 하루에도 여러농가를 집단 합숙을 하면서까지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백신 접종활동이 있던 후 14일 이후에 발생건수를 보니 무려 110건이었는데 바람직한 예방적 백신 접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축신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 사육을 하지 말 것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 밀식사육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 활동을 전개할 의향은 어떠신지요?

[답변] 백신접종 지침은 나름대로 그 과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초기에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밀식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최대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보상하고 다만 미등록이나 밀집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신고·무허가 가축사육 관련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50㎡이상의 돼지사육장과 100㎡이상의 소 사육장은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구제역 농가 중에서도 무허가, 미신고 농가들이 많습니다. 법령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무허가, 미신고 농가들의 구제역 매몰로 인한 가축 보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미신고, 무허가 농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처할 부분은 대처하고 또 지원을 통하여 양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 답 변

최미애 의원(교육위원회)



자율학습 영향 연구분석

[질문]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구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답변] 사교육보다 자율학습이 3배정도 학습효과 높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질문] 반강제적이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묶어두는 자율학습은 청소년의 자유와 건전한 여가를 제한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가출과 자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학습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율학습 선택 및 지도점검

[질문] 학생, 학부모의 희망조사 후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학생의 자율학습 선택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학교현장 나름대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서를 받아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011년도 자율학습운영계획에 보면 학기별로 1회씩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도 지도점검 했습니까?

[답변] 학교별로 2회 정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자율학습 환경개선

[질문]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는 건 한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야간 자율 학습 환경이나 방법, 내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자율학습은 학생을 교사가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분위기를 만들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질문] 학생들의 욕구나 요구는 옛날보다 다양해지고 많이 변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환경과 방법으로 자율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답변]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방안

[질문] 학습과 휴식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쉬고 싶거나 졸릴 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공부만 하는 공간 등을 따로 마련할 생각이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하는 정도의 자유행동 전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공부하지 못해 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지 못한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확인해 보고, 그럴 경우 바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율학습을 학교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청,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위원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서 점검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애정과 지원, 격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원과 격려가 일종의 부담과 간섭으로 느껴지게 되면 효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들과 도의원님들이 점검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나 그 이외의 분들이 학교에 와서 점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299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 답 변

장선배 의원(정책복지위원회)



지방재정 조기집행 중단 요구

[질문]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과 조기집행 중단을 위한 그 간의 대정부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시·군을 포함하여 목표액이 3조 3,516억원중 집행율이 49.27%로 전국 10위입니다. 지방 재정 조기집행 추진 시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와 낭비·비효율 요인 제거 등 내실 있는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반기 공사집중, 이자수입 감소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중단 조치로는 시·도 부시장·부지 사 회의 및 단체장·부단체장 회의시 수시로 조기집행 추 진에 따른 정책을 건의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 존자원 비율이 높은 충북도의 여건상 조기집행 중단을 위 한 독자적인 행동은 무리가 따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질문] 과학기술부의 입지확정 발표(2010.1월) 후 계획변경에 대 해 과기부에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2010. 8. 12 충청권 3개 시·도지사 행정협의회 개최시 입지 명시를 요청 했습니다. 또한 교과위원장 방문, 충북 도의회 및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충청권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질문] 과학벨트 입지선정 등 의사결정에 핵심역할을 하는 과학 벨트위원회 전제위원 20명 중 영남인사가 9명을 차지하 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정부의 당연직 위원 편중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평 가기준 등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진행될 경우 강력히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분산배치 가능성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은 무엇입 니까?

[답변] 거점지역에 집적하여야만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분 산배치에 대해 충청권이 공조하여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 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

[질문]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실태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노인일자리 6,691명에 100억원이며, 시니어클럽은 2014년까지 3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 로는 노인일자리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일자리 확대 가 필요하며 일자리 확대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감사의 문제점은 무엇입 니까?

[답변] 사회복지시설은 유형별로 근거법령 및 운영규정이 별도 로 마련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시설 지도 점검시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들도 애로 사항 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정홍보관 정책실패 책임

[질문] 도정홍보관 폐관 사유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답변] 2007년 7월부터 3년간 운영결과 이용객 저조로 활용개 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2010년 6월 당선자 업무보고 시 폐관 활용방안 검토 지시를 통해 같은해 9월 도 출입 기자단 간사 건의로 도정 홍보관 공간에 브리핑룸 설치와 기자실, 공보관실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도정 홍보관 설치는 당시 오송·오창과학단지, 오송역, 청주공항활성화 등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과 충북의 미래 비전을 우리 도민과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으며,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관을 설치하고 지자 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홍보 경쟁체제 구도속에서 우 리 충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을 도모 한다는 충장에서 심층 검토하여 홍보관을 건립 추진하였 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298회 임시회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통과 돼야

최미애 의원(교육위원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했으며 도교육청의 태도는 '마치 공은 일단 교육위원회로 넘어갔으니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위원회 비판 기사가 실렸고 이에 우리 위원회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1월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으며 그 후에 아시다시피 학원가의 극심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은 학원 교습에 관해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안전을 위해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연합회는 교습시간 제한을 수정 의결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학원 연합회 의도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며 방과 후에 하는 학습 선택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학원 연합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조례를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 조례안이 학원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존재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내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이 끝나고도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고 또다시 학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드는 시간은 보통 새벽 2시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 폭력적 상황이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무지막지게 일률적으로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방식에 대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 보복성 교사 중징계 사라져야

이광희 의원(교육위원회)



충북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민노당 후원교사들에 대해 2명 해임, 5명 3월 정직, 1명 1월 정직으로 강력한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지난 서울중앙지법은 1월 26일 12명에 대해 벌금 30만원, 4명은 50만원 그리고 1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가벼운 과태료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원 또는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며 오히려 경징계를 두는 듯한 사유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판결이 예상되어 도의회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법원판결 이후로 보류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법원판결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단행하고 전국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렸는데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징계결정과 비교해볼 때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중한 처사입니다.

특히 당시 징계위원장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비 영수증이 발견되어 정당법을 위반하였기에 교사를 해임조치 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당법은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후원을 하여 현행법상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3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충청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선고형량보다 과도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충청북도 교육청의 중징계결정에 대한 충북교육계의 성찰이 있길 기대하며 차제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도민 직선의 자치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재량권을 활용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상회복의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98회 임시회

생산적인 도정질문·답변을 위한 제언

장선배 의원(정책복지위원회)



충북도의회는 개원 후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하나씩 실천하면서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정질문이 대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적인 도정질문·답변을 위해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과 의회와의 관계설정 문제입니다. 지난 7일 한 의원님이 「집행부로부터 도정질문을 포기하도록 협박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예정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자인 정무부지사는 「지시보다 실무를 잘 아는 국정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연의 임무도 정도를 넘어서면 해당 의원을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도정질문은 물론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의원 압박' 논란이 일지 않

도록 의회 관계 임무수행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큰 틀의 도정시책이나 정책방향은 지시에게,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정질문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정질문은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과 현안 추진이 주된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거나 정책의 잘된 점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질문 내용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정질문 형식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일문일답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도정질문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으로 의원별 연간 횟수를 1 내지 3회로 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단 변경된 제도를 잘 시행해 보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또다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체 운영이 아닌가 합니다.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박중성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적 욕구도 함께 증가합니다. 21세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문화예술에서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보고서를 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가활동비 지출이 GDP 대비 가계와 국가가 종합지출 수준에서 4.6%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북도 조사대상 중 63.8%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연 1회 이상 직접 관람하였으나 36.2%는 전혀 관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16개 시·도 중 10위에 머무르는 수치입니다. 반면 1년 이내에 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1.4%가 있다고 응답하여 16개 시·도 중 문화향수 의지는 4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 의지는 높음에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문화시설의 부족입니다. 2010년 기준 도내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도서관 32개, 박물관 39개, 미술관 7개, 문예회관 12개로 타 도에 비해 기반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중문화와 순수문화 공연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청주·청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계층간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불균형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예술 재정이 부족합니다. 문화는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문화예술 재정이 증가는 되었지만 보다 많은 문화예술 복지의 신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재정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수권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일반회계의 1.34%인 충청북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최소 2% 이상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작천보 퇴적토 활용방안 마련해야

임헌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본 의원은 1962년에 설치된 금강10공구 작천보의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상류부 퇴적토의 토시방류는 자원낭비이며 작천보 하류부의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량골재의 공매처분 등 처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는 준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작천보 퇴적토 지점을 포함한 하상에서는 토양오염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형식적인 표층(30cm) 조사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 조사된 지질조사 내용이 오염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 7일 작천보 상류부 30m 지점 중앙과 좌측 2곳에 대하여 구간별 1m씩 지층 5m까지 보링시추(Boring)를 통해 총 10개의 토시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질오염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은, 납, 아연, 니켈, 6가크롬 등 중금속류 8개 항목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라는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천보 상류부 퇴적물은 우량 골재로 판명되었습니다.

더욱이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퇴적토 즉 우량골재라면 지난해 낙동강 부근 사업장의 하천골재 판매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북도는 청주시, 청원군과 협의하여 골재의 공매 추진 등 지방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퇴적층이 2.4m, 보 상류로 200m가 쌓여 있다면 작천보 폭이 320m이므로 골재량은 153,600㎥가 됩니다.

이는 15톤 덤프트럭 19,200대 분량으로, 현장 판매단가를 ㎥당 7,000원만 계산해도 10억여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생기게 되어 어려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북도는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도정실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가양득의 작천보 퇴적물을 공매처분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삶의 질 높이는 문화예술정책 돼야

장병학 의원(교육위원회)



고품격 문화예술 창조 역량을 통해 158만 도민들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충북 문화예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 우리도 총예산 2조 8422억 9천5백만원 중 문화예술 총예산이 1.24%인 353억 1천4백만 원으로 16개 시·도중 13위 수준입니다.

2011년 본예산에 탈락된 문화예술 예산은 물론 각종 우리 도 문화예술 예산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2.0% 이상을 추경에 상정해 주시고 2012년부터는 타 시·도처럼 3% 이상의 문화예술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문화예산중 국비 114억 3천6백만원중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비 2억 4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내 단위 마을마다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을회관에 유익한 도서와 컴퓨터 등 소규모 예산을 들여 마을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독서활동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문헌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마을 도서관이 시급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내실 있게 만들어 운영한다면 158만 충북도민의 독서의식은 한층 배가될 것입니다.

셋째,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충북북한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58만 충북인들의 자존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합 충북문화예술타운을 지사님 임기 내에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지사님께서 158만 도민의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해 민법 제32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의해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182억원을 승계 받아 금년 7월 1일에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북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 12조에 따라 해마다 예술인들에게 보다 품격 높은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사님 공약사업인 2014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마련해 주시어 300억원 이상의 문진기금 자원 확보에도 깊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매일

2011년 04월 19일 (화)
02면 종합

도의회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추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례안은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청원 2)이 제안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는 오는 6월 조례 제정에 앞서 도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매년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중부매일

2011년 03월 21일 (월)
15면 사설/칼럼

역동적 충북도의회를 응원한다

충북도의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 17일 폐회한 제 28회 임시회 회기동안 도의회는 정해진 안건 처리와 함께 여러 현안에 적극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 폭넓은 사고로 다양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변화하는 의회상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일본 대지진과 관련 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중 가장 먼저 집행부와 도쿄 육청으로부터 지진대책을 논의한 것이 무엇보다 돋보인다. 학교를 비롯 해 도내 공공건축시설에 대해 내진설 계 현황, 안전대책, 총복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 논의했다. 게다가 일본 지진재건포 도시간 아사하시에 위 로 전문과 함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진 발생 5일안에 모든 조치를 할 정도로 신속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 의 소규모 농촌학교 정형설명회는 비록 무산되었지만 성과는 컸다.

다. 회기 다음날 박문화 운영위원장
이 오송 참복단지 정주여건에 대해
충북도, 청원군, 오송이전기관 관계
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것도 열린
회기, 상시 일하는 의정활동의 수반사
례로 꼽을 수 있다. 도의회 사정 처음
으로 대변인을 두고 오송과 소통하려
는 노력도 달라진 모습중 하나다. 공
청회도 그렇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학원교습시간 제한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에는 사전 공청
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도
매우 공경정이다. 반면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도정질문에 대한 방식을 정하
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은 충분한 논의
없이 다소 성급한 것 같아 아쉽다. 열심
히 일을 하되하면 비난 받을 때도 있
다. 그렇다고 복지부동하고, 구태를
보여서 안된다.

이번 도의회는 분명 과거와는 다른 역동성이 일어난다. 이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칭찬 받으려 노력하기보다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고, 충돌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그래야 정의와 혁신이 나오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과
초·중·고
교를 한
지역을
1곳 하

충청매일

충북 정치권 “과학벨트 분산 안돼”

2013년 4월 15일 (수)
4월 15일 (수)
1-114

도의회 “충청권 조성 위해 대전·충남과 연대투쟁”

한글은 신중을 사할수록 사실상 백지화한 정부가 영남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열됐을 뿐 아니라 청리라는 물작업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송파지역 정치인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래해 민주당 송파도당 위원장과 홍재현(한민당) 국회의원은 3일 송파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전원이 대구·경북의 산간 농촌을

러기 위해 과학벨트 본산배치를 강행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신공항 계획과 과학벨트의 대구·경북 본산배치를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 사전 장의자협 차출을 통해 대통령이 과학벨트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아그의 의심을 샀다"고 주장했다.

구·경복) 만을 달래기 위해 과거 법도를 분간하던 장차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라며 '법가가 분간대치를 시도한다면 정권파전운동도 불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디어도 기자회견을 갖고 '태종시 특별법 수정안'에 국회사서 논의를 할 시 충정위법을 철폐해 만들고 국론을 통일시킨다'는 뜻이며 과감한 국정

조성현이 대선공약이 아닌 안 봐도 뉘는 의회는 "향남자택" 재건이 발생했고 재건에 가속기 가동이므로 과학벨트를 조성하듯"이라며 "과학벨트" 위해 방송통신 3개 시·도(충청·전북·전남)에 대한 300

충청타임즈

2011년 04월 19일 (화)
05면 중합

충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연 4회→6회로 늘리기로

충북도의회는 18일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기회를 주고자 연 4회 시행되던 '청소년 의회교실'을 올해부터 6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청소년 의회교실은 19일 오전 청주 우암초교, 제천 장락초교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천영준기자

/천영준기자

忠濟日報

2003년 4월 25일 4월 23일
4월 23일 4월 23일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충북도·시·군의회, 분산배치 반대 결의

총액 50억 2000여 원의 A4용지, 원고권
매달리는 국제회의장(2012년)을 통해 중
간에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제라도 재정을 절감할 필요는 없
지만, 국가정보의 안전에 있어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2012년 이상향”에 대
응하여 국가정보의 안전을 위한 상설 비
밀정보를 위한 것 도의 안전을 위한 것
없고 있다.” “2012년 국가정보의 안전
을 위한 것 도의 안전을 위한 것 도의
안전에 대한 것 도의 안전을 위한 것

[illegible][illegible]

로 늘리기를
올해 첫
일 오전 7
초교생 70
린다.

충청투데이 11년 04월 21일 (목)
05A면 종합
"작은도서관 지원제도 필요"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서관 분야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들과 '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문화위 김영주 의원은 "2009년 현재 충북지역에 255개의 도서관 중 47.1%인 120개의 도서관이 청주·충주·제천에 편중돼 있고 청원군을 제외한 군 지역 도서관은

문에 지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 건설소 도서관 수는 미달에서 지수 통해 공급하고 있는 중요하다

청주대 수는 "작 표도서관 개별 작발맞춰 피력했다 연규민은 "대표 상호간에 력구도를 격차 해소 주요내용다.

도의회 된 관련 대표도서관 제정될

동양일보

2011년 03월 11일 (금)
05면 정치

"충북 고령화 대비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10일 오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조례안의 내용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대 한규람 교수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규람(민주당·청주1) 의원은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대부분이 국비 또는 시·군비이고, 도 예산은 5%에 불과하다"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도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한 청원군노인복지관장은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숫자만 확대한다"며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고임금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의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노인 일자리 추진기관에 대한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오는 5월 조례안을 심정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2011년 03월 15일 (화)
05면 종합
"빠른 시일 내 아픔 극복·복구 되길"
도의회, 결연지에 위로전문... 자을 성금모금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는 14일 일본 동북부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로전문과 함께 성금을 모금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충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아키타시현에 도의장 명의의 위로전문을 발송하고,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을적인 성금을 모금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형근 의장은 위로전문에서 "애가치 없는 대지진으로 비통에 빠진 일본국민들과 승원을 같이한다"며 "빠른 시일 내 아픔을 극복하고 복구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 산하경제위
로 도와 전문가 등

이 참여하는 합동간담회를 갖고, 충북지역의 지진대책과 내진 설계현황, 향후 안전대책, 일본 지진이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간담회를 갖

고 도교육청의 학생들에 대한 재난 대비 교육 실시 현황,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충북지역의 지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재현기자
jcc@cheonkiz.com

忠清日報 11년 04월 26일 (화)
05면 종합
예산안 심사기법 직무연찬회

충북도의회 예결특위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성)는 26~27일 옥천 장령산 휴양림에서 예결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 추경예산안 심사기법과 지방재정의 이해를 돕는 직무연찬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는 제300회 임시회기 중 예결위에서 다뤄질 올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기법과 요령을 터득하는 자리다.

예결위는 이날 실무위주 사례를 들어 실질적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도 예산정책처 행정사업팀장과 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을 초빙해 예산

중정타임즈 2011년 04월 21일 (목)
05면 종합
지식정보 격차 해소 나선다

충북도의회, 대표·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추진

충북도의회가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 도서관'을 설치하고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0일 지역의 대표 도서관을 지정·지원하고, 작은 도서관을 공립도서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대표도서관 설치·지원조례'와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국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대표 도서관 조례'를 제정했다. '작은 도서관 조례'는 강원도와 전라북도만 제정해 놓고 있다.

조례 제정 작업에 앞서 이날 도

의회가 마련한 '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 공청회'에선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청주대 박동철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표도서관은 중앙 집중적인 도서관 정책과 분산 발전해온 도서관 서비스를 시·도 지역단위로 조정·통합해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는 대표도서관 관련제도를 마련한 뒤 시·군별 작은도서관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준기자
cheonkiza@cctimes.kr



◀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위 방문

행정문화위원회는 3월 11일 충주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공사 현장 시찰 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 충북학사·청림재 현지확인

정책복지위원회는 4월 13일 충북학사와 청림재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시설을 확인했다.



◀ 도계마을 육성사업장 현지확인

건설소방위원회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도내 도계마을 육성사업 현장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원, 옥천, 영동 지역의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다.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현지확인

행정문화위원회는 3월 9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을 방문하여 재건축 추진계획과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교육위원회 무상급식 현장방문

교육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청주우암초등학교 급식현장을 확인했다.



▲ 무상급식 직접 배식

충청북도의회 무상급식 협상지원단 도의원들이 3월 15일 청주 석교초등학교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에게 직접 배식을 했다.



▲ 일본 대지진 대응방안 마련

충청북도의회는 3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하여 도내 대일무역에 대한 피해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실시했다.

▶ 전체의원 연찬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정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 시의회 김용석 의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나도 BEST 지방의원」이란 주제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 학원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충청북도의회는 3월 8일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학부모, 학원연합회 등 이해관계인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 문화예술분야 정책 간담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13일 회의실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 문상욱 회장 등 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문화예술분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 예산결특위 예산절감방안 토론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5일 회의실에서 예산기능과 부문별 정책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실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

정책복지위원회는 4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도연합회 남상래 회장 등 도내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청와대 향의방문

4월 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충북지역 국회의원, 과학벨트 대선 공약 범 충청권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향의 방문했다.



◀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북도의회는 4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청주 우암초등학교 학생과 제천 장막초등학교 학생을 초청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 청주 셋별초 인조잔디 농성장 방문

교육위원회는 최미애 위원장과 이광희 의원이 천막농성중인 셋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관계자, 학부모, 주민모임 대표 등을 만나 공사 진행여부에 대한 검토를 협의했다.



▲ 지진피해자 돕기 성금 전달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이재민들에게 도와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вол 모금한 274만 1천원을 방송사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다.



야간자율학습 논쟁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 필요하다

임현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최근 충청도내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측면에서 자율학습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견해와 학생의 학업성취, 학력신장 측면에서 자율학습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견해 내지는 학생의 학습선택권 및 자율성에 대한 주장과 학교장의 학교운영 재량권에 대한 주장 간의 대립으로 표면화되었다.

이런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 뜻일 것이다. 즉,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라는 이분법적인 시각보다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2일 충청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 도정질문 이후,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자율학습과 학생들의 휴식 공간,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 사용 공간, 서로 건전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 등 자율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실태파악과 그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도의회가 어느 정도 합의와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4월18일 충청북도교육청 서면질문 답변서에서도 “자율학습의 목적과 도교육청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합동점검방문단 구성에 동의하며,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습이 시행되는 시간 중 상황에 맞게 수시 방문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밝혔다.

이런 논의는 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안의 매우 중대함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사회단체, 도의회 모두가 관심이 높다.

충북도의회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충청북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현장 실태점검을 통하여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의회 본연의 의무이자 역할이라 본다.

이제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은 교육수요자와 소통하며 지역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교육자치란 모든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모쪼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자치가 요구되는 시점에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것인지를 숙고할 시점이다.





“도 넘은 정부의 지방자치 역주행”

‘자치는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다’ 실감



장선배 의원(정책복지위원회)

다음 달이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된다. 그동안 직접 의정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느꼈다.

이 과정에서 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한계도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사실 내부에서 느끼는 지방자치의 한계는 외부에서 바라본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과 보람도 많았지만, 지난 기간을 요약하라고 하면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에도 원안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또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대대적으로 추진됐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다시 제시되기도 했다. 대통령 스스로 과학벨트 충청권 건설 공약을 파기했고, 교육부도 충청권을 명시했던 1년 전의 발표를 뒤엎었다. 최근에는 부동산대책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 방안을 내놔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다. 지방세원을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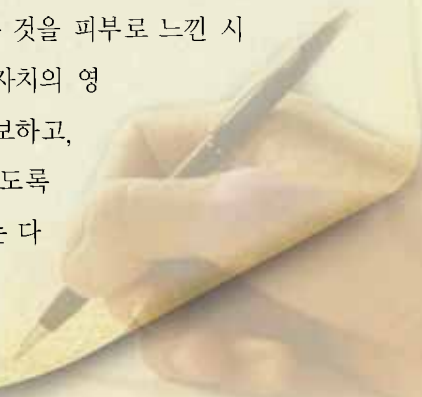
지난 2009년 시행한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조기집행은 지방재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시책이다. 성장률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 수단으로 지방재정이 활용되고 있고, 또 희생당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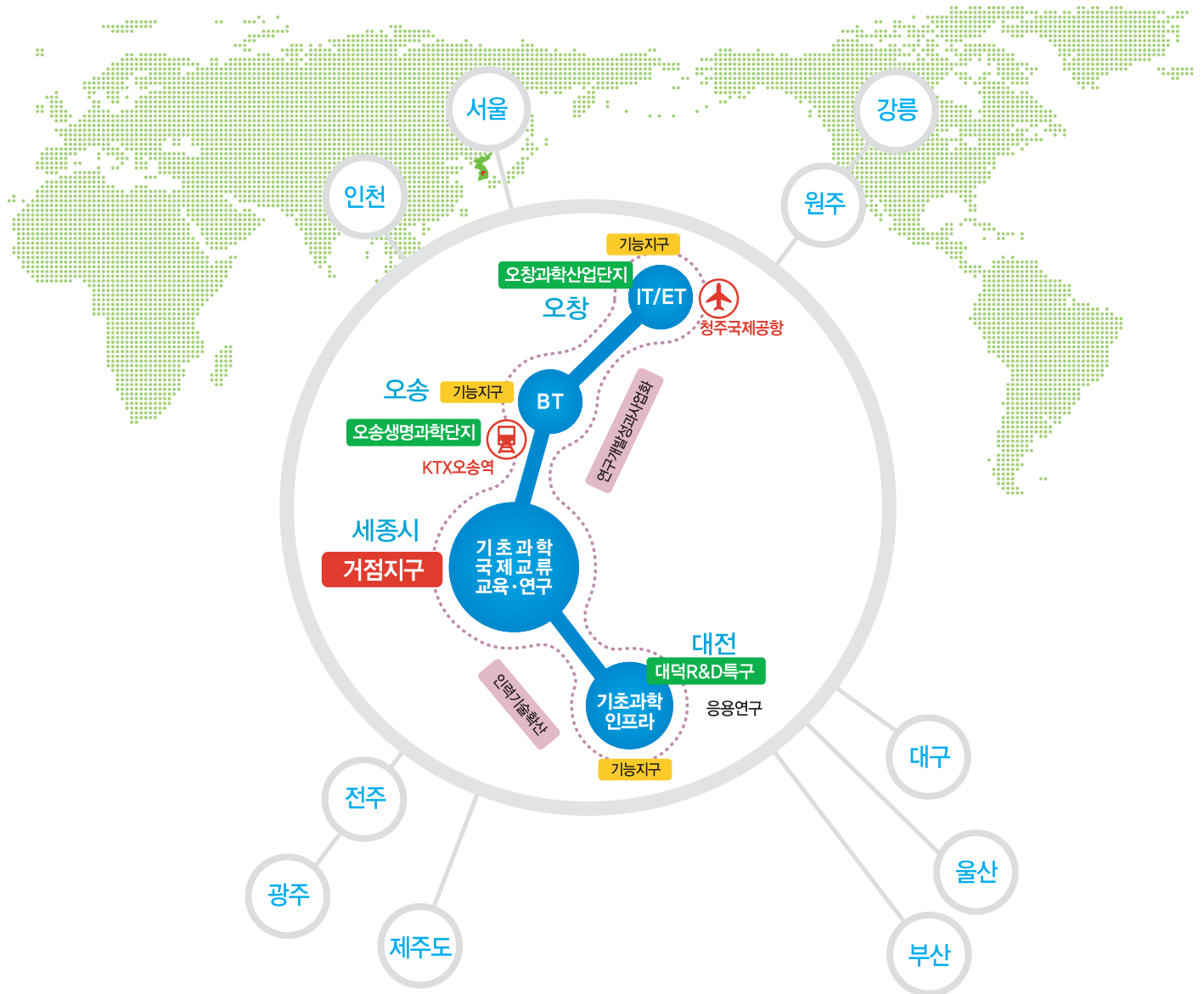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역주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과 지방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역부족이었다. 현 정권의 정책기조가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보다는 중앙 집중과 특정지역 편중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진행형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화급한 현안은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백지화 선언 이후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대전역에서, 청주체육관에서 과학벨트 사수 쟁기대회가 계속됐다. 3월부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다. 도민들의 과학벨트 사수 열기도 뜨거웠고, 많은 분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고 분개했다.

지난 1년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 시간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이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